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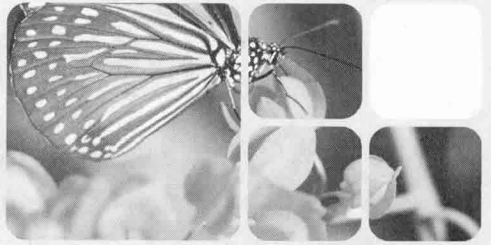
환



소

식

경 계



환경부, 2011년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업폐수에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물속에 존재하는 동식물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산업폐수 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통합 평가하고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를 위해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동 제도에서 말하는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이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하게 되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중·다량 사용

하는 35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준치는 외국의 기준, 국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철강산업시설 등 30개 업종에 대해서는 TU 2로 설정하였고, 도금·염색·합성염료제조 시설 등 일부 독성이 높은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TU 4 및 TU 8로 하되, 2016년부터 TU 2로 강화되도록 하였다.

다만, 청정지역내의 배출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TU 1)을 설정하였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산업계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생태독성 원인물질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저감방법 및 저감기술, 각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환경관리공단 등 공공 전문기관의 지도하에 기준 초과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생태독성 기술지원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생태독성 전문시험기관 및 민간 컨설팅업체의 육성과 함께, 생태독성 원인 진단 및 저감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수립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제3차 '건설CALS 기본 계획' 확정

건설교통부는 건설정보의 국가표준체계를 정립하고 건설사업 정보화를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까지 확산·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건설사업 정보화의 비전과 전략목표 등을 제시한 제3차 「건설CALS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14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란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한 통합 정보화 체계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를 선도하는 건설CALS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표준화를 비롯한 4대 부문별 11개 중점추진분야에 대해 33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한 건설정보 국가표준체계(KS) 정립을 통한 표준개발을 활성화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건설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수준의 건설사업 정보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건설CALS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까지 확산·적용을 추진하고, 건설사업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CALS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건설사업 정보화 지원 정책 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제3차 '건설CALS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약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표준화(145억원), 연구개발(98억원),

운영 및 확산(196억원), 정책개발(23억원) 등 4대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구축 강화해야

경제계는 미래 블루오션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에 불과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 공동 기술개발,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원에너지위원회(위원장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는 지난해 12월 21일 전경련 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13% 수준으로 선진국인 덴마크(13.2%), 프랑스(6.4%) 등에 비해 매우 낮아 보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는 공공기관 신축 시에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중·개축까지 확대 적용하고, 학교, 군부대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발전차액보전제도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적용대상도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초기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을 위한 발전차액 기준가격 및 발전원별 적용가격 기준의 합리적 책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실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기금 조성에 정부 및 공공부문의 매칭펀드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SK 신현철 부회장(위원장), 대성산업 장석정 사장, 삼천리 이영복 사장 등을 비롯한 위원 20인이 참석했으며 전경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선언문'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사업 실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李起燮)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조명기기를 고효율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하고, 전기 설비 안전점검을 해주는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이 지난해 12월초부터 착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저효율조명기기를 더 밝고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고효율조명기기로 무상교체하고 취약한 전기설비의 안전 점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551개소를 대상으로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 내선설비 무상점검 및 간이보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가 완공되면 연간 약 7,490MWh의 전기 절약이 가능하여 총 8억 240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설 1개소당 연간 약 150만원의 에너지비용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열악한 시설현황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범위에 속해있지 않았던 많은 복지시설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해양수산부, 거북선펀드로 우리바다 지키다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정 건조를 위한 '거북선 2, 3호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서명식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조선히otel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기관투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거북선 2호'와 '3호' 선박투자회사는 각각 해양경찰청의 중형 경비함정 8척(500톤급 5척, 300톤급 3척)과 대형 경비함정 1척(3,000톤급)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247억원의 정부 초기지분금과 총 2,178억원의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간투자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대형 경비함정 9척은 30개월의 건조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청에 인도되며 선박대금은 함정 인도 후 7년 동안 정부재정으로 분할 상환된다.

특히 '3호'의 대형 경비함정은 지난해 말 독도 경비를 위해서 긴급히 투입이 결정된 최신예 함정으로 우리 해양경비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거북선 1호 선박투자회사'로 7척의 경비함정을 건조한 이래 해양경찰청은 '거북선 2, 3호 선박투자회사'까지 출범시킴으로써 경비함정 16척을 민간 자본을 활용해 확보하게 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자본시장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선박투자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22일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선박투자회사는 여러 척의



선박에 동시에 투자가능하게 되며, 최소 투자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조성된 선박펀드는 2004년 2월 첫 출시되어 2007년 12월까지 누적 64개 펀드에 3조7000억원을 확보하여 77척의 선박에 투자하는 펀드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환경부, 지난해 12월부터 갈수기 수질오염사고예방 특별대책 추진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도 급수중단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및 시·도, 유역(지방)환경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방제훈련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시·도에서는 물 관련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방제훈련을 광역상수원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수계별

로 지자체, 소방관서, 방제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를 파악하여 대형사고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수계별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계획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갈수기 하천 유지용수 부족 및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하여 댐 방류량 증·감 요청시에는 수자원공사 등 댐관리기관에서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원의 특별감시를 위해 수계별 항공감시대, 5대강 환경지킴이, 민간 자율감시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하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악성폐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환경감시대 합동단속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대표자·환경관리인 간담회 개최, 자율환경관리 협조문 발송 등 사전계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상수원주변 통행제한도로서 불법으로 유류·유독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 근절을 위하여 지자체·경찰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통행제한도로 대상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유류·유독물 저장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갈수기간중 안전점검을 1회이상 실시토록 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매월 갈수기대책 추진실적을 취합·분석하여 문제점 발견시에는 즉시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㉔